

다산포럼

김민환



2005년 8월 8일, 무정부주의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G-8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 회의가 열리면 응당 반대시위가 따르곤 했는데 이번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신원 노출을 꺼려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다. 경찰로서는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었다.

동영상 블로거로서 그동안 시위현장을 촬영해 여기 저기 제공해 온 조쉬 울프(Josh Wolf)는 이 시위도 생생하게 찍었다. 그는 며칠 뒤 지역 활동가의 뉴스 웹사이트인 ‘인디비이’(Bay Area Indymedia)에 비디오 자료를 올렸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국인 KRON에게 편집한 비디오 몇 개를 팔았다. 그가 촬영한 비디오는 경찰과 저항 운동가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의 일련의 비디오 내용이 알려진 뒤 FBI는 울프에게 비디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울프가 이를 거부하자 FBI는 그에게 증거문서 제출명령(subpoena)

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G-8 반대시위와 관련한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컴퓨터까지 7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FBI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블로거도 기자인가?

울프가 이 명령에도 불응하자 FBI는 곧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기변호사조합(National Lawyers Guild)이 변호를 맡았다. 변호인단은 울프에 대한 과도한 요청이 다른 언론들에게 의욕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2006년 8월 1일 울프를 법정 모욕죄로 구속했다. 변호인단이 즉각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였으나 울프가 비디오 자료 등의 제출을 끝내 거

부하자 9월 18일 보석을 취소했다. 울프는 9월 22일 다시 구금되었다. 그의 수감기간은 기록적이다. 2007년 2월 7일까지도 울프는 풀려나지 못해 살인사건에 대한 공표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168일 동안 구금된 휴스턴의 프리랜서 레겟(Vanessa Leggett)의 구금기록을 깼다. 2007년 4월 3일 연방조정기구가 울프의 석방을 요구하자 비로소 법원은 이 명령에 서명했다. 울프는 226일 만에 풀려나 자유를 얻었다.

검찰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려면 이제 많은 언론단체와 한판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은 울프를 석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하여 개인 활동가도 법적으로 언론사 기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미국 SPBG의 편집인 브루만(Bruce Brugman)의 울프사건에 대한 논평이 잘 시사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의 개인 언론인을 어찌 투옥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불가리아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브루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여기는 한국이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디산연구소 제공〉

그러나 이 행정은 성겁게 해소되었다. 미국의 전문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가 울프에게 자유롭고도 독립적인 언론의 원칙을 드높였다 하여 ‘올해의 기자상’을 수여했다. 그밖에도 여러 곳에서 울프를 기자 자격으로 표창했다.

검찰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려면 이제 많은 언론단체와 한판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은 울프를 석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하여 개인 활동가도 법적으로 언론사 기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미국 SPBG의 편집인 브루만(Bruce Brugman)의 울프사건에 대한 논평이 잘 시사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의 개인 언론인을 어찌 투옥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불가리아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브루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여기는 한국이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디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영집



요즘 정부 행태를 보면 이 정부는 ‘수도권공화국’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가 나왔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들어가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발표되었고, 1년도 안 된 8개월 만에 수도권에 전면적으로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개발 체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의 빙장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1994년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었던 공장총량제가 14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어버린 셈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필자는 일주일 전 장성에서 충남 강경까지 도보여행을 한 일이 있다. 여행 중 놀란 것은 백여 개가 넘는 마을을 지나며 농촌에서 뛰노는 어린이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지난치는 지방산업단지도 입주기업이 대부분이고 취약한 중소기업들뿐이었다. 과거에 이름난 김제며 익산, 강경 같은 지방도시는 이미 쇠퇴했고 지방 곳곳은 폐허가 이를 데 없었다.

지금 정부는 처참한 지방현실에 귀 막고 눈 감고 있다. 지방 무시 정도를 넘어서 지역 고사(枯死)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는 수도권경

수도권공화국의 비극

하여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은 1년도 못 돼 수도권규제 완화로 손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키우는 편파적 사업이다는 비판에 귀를 닦은 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지역이 난리다. 수도권 공장 설립이 전폭 허용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려 하겠는가. 이미 이전한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물류비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오를 땅값 때문이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가까스로 지역경제기반을 만들어가는 마당에 정부조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 자체다.

광역경제 개발 계획도 수도권을 빼지 않으면 수도권 키우기 정책이 될 전망이고, 지방의 격렬한 반대로 한걸음 물러났지만 정부가 언제 혁신도시 효과 없다고 무작위계획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성처난 아이 얼굴, 성형수술때 보험 적용 안된다니

아이가 간식을 먹겠다며 냉장고 문을 열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교자상이 떨어지면서 아이라 다쳤다.

너무 놀라 병원 응급실에 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미 끝부분이 비껴맞아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안심이 되었다.

이마가 찢어진 것은 퀘어야 하는데 의사들은 상처를 퀘는데 ‘보통으로 할지’, ‘성형으로 할지’를 물었다. 보통으로 하면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돈이 일반적 사고에 의한 수술 조차 보험 적용이 안된다니 억울하고 지나치게 장삿속이라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미용 목적이 아닌 성형 수술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의 다른 부분도 아닌 얼굴에 상처를 남길 수 없어서 성형으로 해달라고 했다. 아이의 얼굴에 흉터가 없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 사고에 의한 상처를 퀘는데 ‘일반’과 ‘성형’이 따로 있고, 성형은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돈이 일반적 사고에 의한 수술 조차 보험 적용이 안된다니 억울하고 지나치게 장삿속이라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가족 4명이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돈이 일반적 사고에 의한 수술 조차 보험 적용이 안된다니 억울하고 지나치게 장삿속이라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미용 목적이 아닌 성형 수술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부하자 9월 18일 보석을 취소했다. 울프는 9월 22일 다시 구금되었다.

그의 수감기간은 기록적이다. 2007년 2월 7일까지도 울프는 풀려나지 못해 살인사건에 대한 공표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168일 동안 구금된 휴스턴의 프리랜서 레겟(Vanessa Leggett)의 구금기록을 깼다. 2007년 4월 3일 연방조정기구가 울프의 석방을 요구하자 비로소 법원은 이 명령에 서명했다. 그밖에도 여러 곳에서 울프를 기자 자격으로 표창했다.

검찰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려면 이제 많은 언론단체와 한판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은 울프를 석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하여 개인 활동가도 법적으로 언론사 기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에서 논쟁의 핵심은 신문사나 방송사에 소속하지 않은 개인 블로거나 비디오 활동가도 법적으로 언론사 기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 이었다. 이를로 기자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 언론사 소속 기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겠지만 만약 기자 대접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블로거나 개인 활동가에게는 말 그대로 중차대한 문제였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디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문인



광주시가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시어머니가 한步 더 생겼다’는 발주부서의 염려와 우려 속에 출발했다.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계약의뢰만 하면 되었으나, 심사제 도입으로 계약의뢰 전에 반드시 계약심사부서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게 됐으니 이러한 주제에도 일 리는 있었다.

주무부서인 계약심사과는 설계서 상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 등을 심사해 불요불급하고 부풀려진 예산을 찾아내 절감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 함께 설계서에

거토록 하고 있다.

계약심사과에는 별도의 ‘계약심사 상담실’과 시청 행정포털내에 ‘계약심사 자료방’을 개설해 일대일 상담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재는 공무원들간 대상으로 상담실과 자료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과 민간기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발생된 예산절감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자율 절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산·사업부서의 예산절감은 사업별 원인행위 즉 설계 전에 절감을 해 예산제정 요구를 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계약심사제, 예산 절감 효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단가를 적용해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내 절감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주는 등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은 발주부서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바로잡아줌으로써 사후 감사에 대비하고 예산 낭비를 제거하는 등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도 심사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사업을 임의대상으로 분류해 심사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을 보완했다.

그 결과 업무를 개시한 지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57개 사업(552억 원)을 심사해 9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정 단기의 계상이나 공사 부문의 표준품셈 적용, 비교견적 단가 적용, 인건비·재료비 과다 적용 등을 시정해왔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최초 설계 과정부터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는 예산배정을 받아 완성된 설계를 계약의뢰하기 전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 적용, 새로운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물량의 축소나 사업비 감액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정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조정액 확정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즉 무리한 감액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액 재투자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닌 계약심사제는 앞으로 더욱 더욱 활용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은 물론 민간기업과 시민들도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쓰레기 뒤범벅 공중전화부스 관리대책 세워야

휴대폰이 없으면 문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보니 예전에 길거리 어디에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공중전화기는 이젠 버림을 받고 있다.

얼마 전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공중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화를 사용하면서 기분이 짚찝했다. 공중전화부스의 유리는 깨져 있었고 낙서와 쓰레기로 날려 있었다. 휴대전화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아우디 칸세가 됐다고는 하지만 공중전

화는 엄연한 공중 편의시설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인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관리 조차 소홀해져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전국적으로 약 30만대의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다고하는데 점점 시대의 흐름으로 취급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최중철·광주시 북구 용봉동

시설

‘여수엑스포’ 앞바다 오염 방지할 건가

2012 세계박람회의 주요시설이 들어서는 여수 신항 앞바다 일대가 해양폐기물과 생활하수로 인해 썩어가고 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엑스포는 해양폐기물이 70t이나 쌓여 있고 표층은 50cm까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수질은 2~3등급에 그쳤고 특히 세계박람회 3등급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의 ‘여수 신항 해양환경조사 보고서’는 해양오염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항 앞바다 속에는 해양폐기물이 70t이나 쌓여 있고 표층은 50cm까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수질은 2~3등급에 그쳤고 특히 세계박람회 3등급에 불과했다.

해양수질 3등급은 심각한 수질이다. 수산생물의 서식 및 양식은 물론 해양관광과 여가선용에도 부적합해 공업용 냉각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죽어있는 바다나 달롭는 것이다. 비단 물 투명도 또한 2~2.5m로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실현성 있는 대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신항 인근의 바다쓰레기 수거작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 해양오염의 원인은 그대로 둔 체 쓰레기나 치우는데 그쳐서는 죽은 바다를 살려낼 수 없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실현성 있는 대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신항 인근의 바다쓰레기 수거작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 해양오염의 원인은 그대로 둔 체 쓰레기나 치우는데 그쳐